

이슈브리프 783호  
(2026. 1.14)

## 무인기 침투 사태 이후 북한의 메시지 분석: 남북 위기관리·소통 채널 복원의 필요성

제783호

김보미 bomi@inss.re.kr



## 국문초록

최근 무인기 침투 사태를 둘러싼 남북의 상호작용은 갈등 국면 속에서도 위기 관리가 필요함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가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히자 북측이 즉각 반응하며 메시지를 교환한 점은, 간접적이거나 남북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설적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해명을 요구하는 '대화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이번 사건을 통한 메시지 교환이 남북관계 조기 개선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재발 방지와 신뢰 축적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명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북측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비상시 소통 채널 복구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와 같이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대성이 부각될수록, 우발적 충돌이나 확산 방지를 위한 소통채널 복구가 긴요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철저한 조사와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남북 간 새로운 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주제어 : 무인기 침투, 김여정, 담화, 남북대화, 9차 당대회

## 무인기 사태 이후 북한의 연속적 메시지와 대응 흐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북한 영공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1월 13일 늦은 시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두 번째로 발표된 공식 입장이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월 10일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1월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으며 개성시에서 강제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대변인 성명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하고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NSC는 해당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북한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국방부 역시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포함해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튿날인 1월 11일 김여정은 우리측 입장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의 영공 침범에 대해 비난하는 한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가 관여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며, 둘째,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 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3일 두번째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다시 한 번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다만 반복되는 강경 표현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추가 설명 요구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번 사안을 둘러싼 북한의 대응이 단순한 비난이나 단절에 그치지 않고, 보다 복합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 김여정 담화의 구조적 특징과 전략적 경계심

북한의 대응에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일부 엿보인다. 김여정은 11일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건 경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여정은 한국이 첨단 드론 탐지 및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민간 드론이 국경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온 것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기술적·군사적 관리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안보 문제로 한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여정은 이번 사태가 남북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남측 일각의 기대 섞인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13일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사안에 대한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 북한이 관계 개선이나 대화 확대보다는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 규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 ‘조건 제시형’ 담화에 내포된 남북 소통의 여지

다만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극대화해야 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대남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통상적으로 내부 정비에 집중하며 대외 이슈에는 관여를 자제해 왔다.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측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한 변화이다.

무엇보다 김여정 부부장의 연속된 담화가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대화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1월 11일과 13일 발표된 담화의 형식과 내용은 일방적 비난이나 단절을 선언하기보다는, 향후 대응의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며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김여정이 부정한 것은 남북 간 소통 자체가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즉각적인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성급한 낙관론이다. 당장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지라도, 사건 관리 과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신뢰를 축적하려는 ‘단계적 설정’이자 남북 관계의 ‘속도 조절’을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현 시점에서 대화 재개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으나,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게재한 점을 고려할 때,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사건을 ‘적대적 두 국가’ 정책 공고화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부각시킴으로서, 곧 있을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기될 새로운 국경 문제는 물론 남측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섬세한 대응이 요구된다.

### 우리의 대응방향: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정적 위기 관리

무인기 사태 이후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에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갈등 국면에서 비롯된 대응이나, 단기간 내 상호 메시지가 교환되었다는 사실은 남북 간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의 소통이 비록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우발적 사건 발생 시 긴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대응 메커니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관계 개선에 대한 성급한 낙관론보다는, 차분한 사안 관리와 실무적 위기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매듭짓고, 그 결과와 북한의 향후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대응은 북한의 명분 없는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군사적 오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긴장 확산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우발적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 상황 시 오해와 충돌을 차단할 안정적인 소통 채널 복원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기존의 제도적 틀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유효한 관리 수단으로서 여전히 잠재적 가치를 지닌다. 향후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군 통신선을 복구하고 상시 협의 체계를 재가동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철저한 사안 관리를 바탕으로 향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을 차분히 조성해 나간다면,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유의미한 행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